

<주제 발표 요약>

(제1주제 - 발표1)

## 세계 식량수급 동향 및 전망 (Global Food Security Situation and Outlook)

끼산 군잘(Kisan Gunjal)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연구위원(Economist))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회의, 2011년 프랑스에서 열린 농업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이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의 증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2007~2008년의 곡물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2010~2011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급측 요인으로는 기상이변 및 자원제약 등으로 생산이 부족해 재고수준이 낮다. 수요측 요인으로는 소득증대, 인구증가 및 바이오연료 등으로 곡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가 및 환율 변동, 제한적 무역조치 및 투기자금의 유입 등 다른 시장요인들 역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와 함께 발간한 향후 10년간의 전망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FAO는 2011~2020년에 식품 및 농산물가격의 수준이 당분간 높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의 농업생산 증가율이, 이전의 2.6%보다 낮은 1.7%에 그치고,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가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재고수준이 낮아, 높은 가격이 단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곡물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 곡물무역조치 및 바이오연료보조금 등과 같은 정책의 변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및 긴급식량비축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1주제 - 발표2)

##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The Need for Public Intervention to Stabilize Prices)

프랑크 갈티에르(Franck Galtier)

(프랑스 농업연구센터(CIRAD) 연구위원(Economist))

CIRAD는 프랑스 개발국 및 외무성의 지원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함께 개도국의 식품가격의 불안정 대한 대책을 연구해오고 있다. 오늘 발표는 이론적 및 실증적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핵심 주제는 사회안전망과 함께 또는 별도로 제시되는, “시장의 역할에 기반한 방법이 가격안정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한가”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은 목표와 방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의 조합을 통해 네 가지 유형(A, B, C, D)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기능 확대를 통한 방법으로는 곡물시장의 기반시설 및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한 가격자체의 안정화도모(A)와 선물시장 및 작물보험의 도입 등을 통한 가격불안정의 효과관리(B)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공공정책에 의한 방법은 재고비축 및 변동관세 등 가격자체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C), 식량원조 및 사회안전망 등 가격불안정의 부정적 효과 축소(D)를 위한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격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한 방법(A, B)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공공정책(D)이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 가격안정화 방안들(A, B, D)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H1), 생산투자에 대한 가격불안정의 부정적 효과가 적으며(H2), 가격과 수확량간의 부의 상관관계에 의한 안정화효과가 크다(H3), 저장업자들은 위험중립적이다(H4) 등의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개도국의 농산물 시장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개도국의 곡물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가격자체의 안정화도모를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C)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1주제 - 발표3)

##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연계 (Nexus of International Trade and Food Security)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식량안보는 1970년대 식량의 가용량을 중시한 개념으로부터 1980년대 경제적 구매가능성, 1990년대 인권보장, 2000년대 소비자선호 충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식량에 대한 경제적 구매가능성 측면에서, 1인당 GDP의 증가에 의해 1960~1962년과 2007~2009년의 식량안보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두드러진다.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s)의 수입의존도의 상황을 보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 국가들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함에 따라, 식량수입국들이 자국 내 농업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의 높은 식량자급률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콩에 대한 자급률의 급격한 하락 및 육류소비의 지속적 증대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곡물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의 제고, 새로운 협정의 체결, 규제제도의 강화 등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된 식량가격체계의 구축을 위해, 자국 내 생산증가를 위한 정부지원, 자금난을 경험하고 있는 소농에 대한 금융지원, 종자, 비료, 물 등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국의 농업투자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제2주제 - 발표1)

## 중국의 곡물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협력방안 (Food Security and Cooperation in China)

니 홍싱(Ni Hongxing)

(중국농업부 농업무역촉진센터 소장)

중국은 현재까지 자국 내 곡물생산의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곡물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식량안보상황 개선에 공헌해 왔다. 또한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기에도 충분한 국내 농업생산량과 최저 곡물수매가격제도를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국내 곡물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곡물생산량 증대는 재배면적 증가보다는 단수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곡물의 고품질생산 비중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및 용도별 식량소비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자포니카 쌀, 밀, 옥수수의 비중을 증가하였으며, 특히 옥수수의 비중이 31%까지 증가함에 따라 사료용 및 산업용 곡물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의 식량수요를 국제무역을 통해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즉, 식량의 국제교역량이 여전히 중국 연간 소비량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고,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지 및 수자원의 제약, 기후 불확실성의 증가, 취약한 농업기반시설, 생산비 상승에 따른 낮은 수익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무역 정책은 단지 비교우위원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식량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농업생산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선택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중장기 국가식량안보방안(2008~2020)에서 밝힌바 있듯이, 식량생산능력 제고, 비식량의 식용으로의 이용, 국제협력의 강화, 식량의 유통·비축·가공 체계의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FAO의 식량안보특별계획의 남-남협력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개도국 농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제2주제 - 발표2)

## 동북아 지역의 곡물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협력방안 (Food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제 곡물시장에서 동북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세계 쌀산업의 중심이며, 세계 최대 콩수입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곡물수급 여건이 불안정할 경우, 국제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3국은 공히 일시적인 자연재해로 갑작스런 쌀 부족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1980년에 260만 톤, 일본은 1993년에 260만 톤, 중국은 1994년에 200만 톤 등 거대 물량의 곡물을 긴급히 수입한 경험이 있다.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3국은 식량안보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의 주요한 식량안보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은 국내생산증대+비축+수출제한+수입확대, 일본은 국내생산증대+소비대책+비축+안정적 수입, 한국은 국내생산증대+비축+안정적 수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생산의 감소, 식량자급률의 하락 등 식량안보 측면에서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서로 가까운 동북아시아 3국은 일시적인 식량위기발생시 최단기간내 식량을 상호간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게 함과 동시에 각국의 식량 생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량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비상시를 대비해 동북아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식량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량 생산, 소비, 무역, 재고, 농업정책 등 3국 간 협력을 통한 동북아 농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